



영산강 대탐사 '2008년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에 참여한 100여명의 초·중·고 청소년들이 28일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인근 영산강 둔치를 걸으며 답사를 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5일 동안 수질 상태를 확인하는 등 영산강 살리기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위지경기자 jrwi@kwangju.co.kr

“공기업 사장단은 영남 향우회”

이명박 정부 임명 73명 중 34명이 영남 출신 ... 호남은 17명 그쳐

힘 있는 기관·금융공기업은 영남 독식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 대부분이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소외, 영남 편중'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조영택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들

어 임명된 73명의 공공기관 기관장 중 영남 출신은 절반에 가까운 34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반면, 호남 출신 인사는 17명으로 전체의 23.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유임 또는 신규 임명된 106명의 공공기관장 중 영남 출신은 3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한 반면, 호남 출신은 영남의 절반 수준인 20명으로 전체의 18.9%에 그쳤다.

더욱이 영남지역 출신들이 권한이 막중한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 기관장 자리를 거의 독식함에 따라 지역 편중 인사 여파가 경제·산업계까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최근 임명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산업연구연구원장·한국개발연구원장·한국과학기술원장 등 주요 50개 공공기관장을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은 29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

했다. 이에 반해 호남 출신은 6명(12%)에 그쳐 영남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근 임명된 신용보증기금·증권예탁원·한국증권전산 등 13개 금융공기업 신임 사장 9명과 감사 6명 등 15명을 출신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영남 출신이 73.3%인 11명이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신임 기관장들 대부분이 영남 출신들로 채워지는 것은 청와대 인사와 총선 공천 과정

에서 소외를 당한 대선 공신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공기업 특위 소속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인사를 영남 인사들로 채운 데 이어 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같은 지역 인사들로 매워 영남 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재까지의 인사에 대한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어 향후 인사에도 이 같은 영남 편중과 호남 소외 인사는 계속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현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등을 외치면서도 인사는 가장 후진적으로 하고 있다”며 “금융기업 신임 사장단은 ‘영남 향우회’”라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외교라인 문책 불가피

美 지명위 '독도 → 주권 미지정' 변경 파문

정부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최근 독도 귀속 국가의 명칭을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진상파악에 나선데 이어 이태식 주미대사를 포함해 주미대사관의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라인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8일 정부와 사이에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 가운데 연방 항공청(FAA)도 독도를 일본 측이 분쟁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리앙쿠르 岩)'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태식 주미대사를 포함해 주미대사관에 대한 문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보고받고 격노해 철저한 경우파악을 지시한 상황에서 최소한 주미대사관 쪽은 문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이태식 주미대사의 경우도 일정부분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함께 독도 명칭의 조속한 복원을 미추에 요청키로 뜻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정경길 대통령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주미대사 등 외교라인의 대처에 화를 냈으며, 철저한 경우파악과 함께 원상회복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김남일·김월출 의원 제명 키로

광주시의회 윤리특위 ... 비리·성폭력 의혹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리·성폭력 연루 의혹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남일·김월출 의원을 제명키로 의결했다.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직 시의원을 사법적 관행이 나오기 전에 제명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환)는 28일 오후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회의를 열고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남일 의원과 성폭행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월출 의원 등 2명에 대한 징계요구건을 심사해 2명 모두 제명키로 의결했다.

윤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구속된 김 의원의 경우 서면 진술서를 보냈으며, 또 다른 김 의원은 직접 출석해 자신의 결백함을 소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의 경우 본인을 비롯, 피해자라는 여성도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제명은 지나치다”며 제명 대신 자진 사퇴

를 권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그러나 두 의원이 품위를 지켜야 하는 윤리강령을 위반했고 시민 대표기구인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제명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들의 제명 여부는 29일 오전 11시 시의회 제 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직 의원(19명) 3분의 2 이상(13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통과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지경기자 dok2000@kwangju.co.kr

18대 신규 의원 재산 평균 31억...17대의 3배

제18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가운데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모두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28일 공개한 18대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61명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재산신고액은 31억7천300만원이었다. 광주·전남 신규 재산등록 의원 10명

의 평균 재산은 19억9천876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17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당시 11억700만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16대 국회 신규등록 당시 16억1천700만원보다도 두배 가량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 15대 32억9천500만원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신고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의원 34

명 가운데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재력가는 18명으로, 17대 신규등록 당시 5명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재력을 겸비한 초선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등록 대상 의원중 재산 신고 1위는 823억2천700만원을 신고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차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용봉2 Humansia 5년임대 입주자 모집

신방집수 2008년 8월 4일 - 6일

방문상담 7월 19일 개관(사업지구내)

임대문의 견본 주택 0331-6801 도시재생사업팀 0330-0668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유망학원 장학 56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IOPE